

## 제3차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위원회 (CAAs)

## 참가보고서

박 광 빈

대한공증인협회 국제이사  
법무법인(유한) 올촌 변호사

## 1. 들어가며

2013. 7. 17.부터 7. 19.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3차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 위원회가 열렸다. 국제공증인협회(U.I.N.L)는 이제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체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 10.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가입하였다. 우리나라가 국제공증인협회 가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는 「공증과신뢰」 통권 제4호 ‘제26차 국제공증인 대회 참관보고서’ (212~215쪽)에서 자세하게 보고한 바 있다.

국제공증인협회는 운영 조직의 하나로 대륙별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지역 내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활동하고 있는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각 지역위원회와는 별도로 아시아지역위원회(CAAs)의 구성이 논의되어 오다가 2011. 9. 25.~9. 2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아지역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아시아지역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과정에 대하여는 「공증과신뢰」 통권 제5호 ‘제1차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위원회 참가보고서’ (230~232쪽) 에서 자세하게 보고한 바 있다.

2012. 11. 26.~11. 27.까지 서울에서 아시아지역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렸다. 당초 회의 개최순서는 국제공증인협회 가입순서에 따라 일본(사전 회의) → 인도네시아 → 중국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 내부 사정상 연기를 요청하여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소수의 인원으로 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잘 마무리 한 경험은 본 협회의 큰 자산이 되었다. 서울 회의에 대하여는 「공증과신뢰」 통권 제6호 국제회의자료 편(135~210쪽)에 자세하게 보고 한 바 있다.

## 2. 제3차 몽골회의

몽골은 예비회원으로 참여하여 오다가 2012. 10. 알제리에서 개최된 국제공증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정회원국 승인을 받고 CAAs의 5번째 회원국이 되었다(2013. 10. 페루에서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결정을 받아 현재 CAAs 회원국은 6개국으로 늘어남). 제2차 서울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가입순서에 따라 제3차 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중국 측은 또다시 내부 사정을 들어 2013년도 회의개최가 불투명하다고 하였다. 몽골은 중국이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장 날씨가 좋은 여름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진환 협회장을 비롯하여 박국수 수석부협회장, 유원규 부협회장, 그리고 박광빈 국제이사 모두 4명이 참석하였다.

## 3. 주요일정 및 아젠다

회의는 칭기스칸호텔에서 영어로 진행되었다. 주요 일정 및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 2013. 7. 17.(수)

- 17:00~17:50 참가국 대표자 사전 미팅 - 칭기스 칸 호텔 3층 미팅룸
  - \* 18.(목) 회의 진행 및 아젠다 관련 논의 / 각국 대표 2인 참가
- 18:00~21:00 환영리셉션 - 칭기스 칸 호텔 3층 연회룸
  - \* 등록 및 칵테일파티, 각국 참가자 소개, 저녁 식사

○ 2013. 7. 18.(목)

- 08:30~09:40 개회식
  - \* 몽골공증인협회 회장 개회사 및 몽골 법무부장관 환영사
  - UINL 회장 축사, 아시아지역위원회 위원장 축사
- 09:45~10:00 회의 주제 안내
- 10:00~11:00 2013/2014 각 국 공증제도 소개
  - \*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각 15분
- 11:00~11:15 휴식(커피타임)
- 11:15~12:00 2013/2014 각 국 공증제도 소개
  - \*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UINL 상임집행부 각 10분
- 12:00~13:30 오찬 - 칭기스 칸 호텔 5층 우르거(Urguu) 레스토랑
  - \* 1번 테이블 : 몽골법무부장관 및 각 국 대표자 1인
- 13:30~15:00 제1주제 토론
  - \* 주제 : 각 국 공증제도의 효율성에 관하여 / 각 10분 발표
- 15:00~15:30 휴식(커피타임)
- 15:30~17:00 제2주제 토론
  - \* 주제 : 상속재산의 양도와 양도 과정에서 공증인의 역할 증대 가능성에  
관하여 (Transfer of inherited property, possibility of increasing  
the role of notary in this process) / 각 10분 발표
- 17:00~17:30 CAAs 차기 회의 개최에 관한 논의
- 17:30~17:40 총평(각국 3분 이내) 및 폐회
- 17:40~18:30 휴식
- 18:30~21:30 저녁식사(환송만찬)
  - 칭기스칸 우르거 단지(몽골 전통가옥 게르 촌)
  - \* 버스로 30분 이동 : 식사 및 몽골 전통 음악 · 춤 공연관람

○ 2013. 7. 19.(금) : 투어 일정 / 버스로 장거리 이동

- 칭기스 칸 추모관, 기마상 등을 관람할 수 있는 훈누(Hunnu) 고유적 조사 박물관 및 13세기 몽골 테마 파크 등 관람(몽골식 중식 및 석식 포함)

#### 4. 대한공증인협회의 주요 발표내용

##### (1) 김진환 협회장의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위원장 축사

(국문)

### 개회식 -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위원장 축사

2013. 7. 18. 대한공증인협회  
김진환 (KIM Zin Hwan) CAAs 위원장

존경하는 Jean-Paul DECORPS 국제공증인협회(UINL) 회장님, Mrs. Ayush Oyunchimeg 몽골공증인협회 회장님, 일본·중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회원국과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등 옵서버로 참가해 주신 국가의 대표 및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해 11월 CAAs 회의에서 아시아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대한공증인협회 김진환 협회장입니다.

먼저 이번 2013 CAAs 정기회의 준비로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참가자들을 따뜻이 맞아주신 몽골공증인협회의 환대에 깊이 감사드리며, 8개월 여만에 여러 회원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몽골회의에서는 회원국 외에도 베트남,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등에서도 함께 참가하여 주어 아시아 지역 국가 간 공증제도 교류가 활발해지고, 공증인 간 친선이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아시아 각국의 공증인 여러분!

오늘로 3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아시아지역위원회는 국제공증인협회의 다른 대륙별 위원회보다 아직 역사가 짧아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의 모든 회원들께서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르다보면 언젠가는 국제공증인협회의 가장 우수한 대륙별 위원회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래나 법률관계의 증거를 보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위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예방사

법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어느 국가의 사법제도 하에서도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인의 사회적, 법률적 책무는 매우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공증의 활용이 곧 그 사회의 선진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특히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상속재산의 양도와 양도과정에서 공증인의 역할 증대 가능성(Transfer of inherited property, possibility of increasing the role of notary in this process)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상속재산의 양도 문제는 한국도 그렇지만 모든 나라에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또한 그 양도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도 종종 일어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여러 나라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때, 상속에 관한 각 국 공증인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상속에 따른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증인의 업무영역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뜻 깊은 논의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시아 각 국의 공증인 여러분!

아시아 지역은 이제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논의함에 있어서 아시아가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성장을 떠받치고 있는 법률문화, 특히 예방사법 분야의 선두인 공증분야의 교류협력과 확산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각 국의 공증인들이 있고, 특히 아시아 공증을 대표하는 아시아지역위원회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과 같은 정기회의를 통해 각 국 공증제도를 좀 더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여 미래지향적인 선진적 공증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값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같은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원국은 물론 베트남,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등 아시아 각 국이 민간외교 차원의 틀 속에서 상호 우정을 돈독히 나눔으로써 각 국 협회와 공증인 간의 우호선린과 친선이 도모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국제회의를 조직한 몽골공증인협회 Ayush Oyunchimeg 회장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환대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문)

**Opening Ceremony Congratulatory Speech by President of  
the Commission for Asian Affairs (CAAs)**

July 18, 2013

Korean Notaries Association

President of CAAs, Kim Zin-Hwan Dr. jur.

Dear President Jean-Paul Decorps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  
Mrs. Ayush Oyunchimeg, President of the Chamber of Notaries of Mongolia,  
Japan, China, Indonesia, Korea; the member countries of the Commission for Asian Affairs,  
representatives from Vietnam, Cambodia, Laos, and other observer countries, and dear  
honorable guests and participants!

I am President Kim Zin-hwan of the Korean Notaries Association. I becam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for Asian Affairs during last November's CAAs Conference.

I appreciate very much the Chamber of Notaries of Mongolia acting as host of this year's  
CAAs Annual Conference, and welcoming the participants amidst their busy schedules in  
preparation for the Conference. It is my sincere pleasure to see the members again today,  
after almost eight months.

This conference in Mongolia has a special meaning as an opportunity for exchange  
regarding notarial systems among Asian countries, and to build friendship among notaries,  
particularly due to the participation of Vietnam, Cambodia, Laos and other countries, in  
addition to the member countries.

Dear honorable notaries of Asia!

Today, the Commission for Asian Affairs is holding its third Annual Conference, and until

now our Commission may have been less active compared to other continental commissions of the UINL, due to its relatively short history. However, if all members of Asian countries cooperate hand in hand, and step by step, we will surely become the most excellent continental commission in 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 in the near future.

As we already know very well, notarial services are a preventive judicial system which keeps custody of evidence for legal relations and diverse transactions in everyday life, in order to prevent disputes and to verify the relevant facts when right holders exercise their rights.

Therefore, a notary's social and legal duties regarding notarial services take a very significant meaning. If notarial services are more actively utilized in society, an advanced culture of contract formation will be more firmly established, since this serves as an important instrument for establishing a society built on trust, in which people perform their duties as promised.

In particular, today's theme is worthy of special attention - today's theme is "the transfer of the assets of a deceased person's estate and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notary's role in the transfer process". We also invite you to participate in the follow-up discussion after the presentation.

Not just Korea, but also all other countries are highly interested in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a deceased person's estate. Legal disputes frequently occur among family members during the transfer of estate assets through inheritance. Therefore, this is a truly important legal issue. Moreover, these days the assets of a deceased person's estate often exist across international boundaries, and therefore the presentation of today's theme takes more meaning, by addressing the role of notaries in each country, the differences among them, as well as the extension of the scope of notaries' duties and easy access to services for the prevention of legal disputes regarding inheritance.

Dear honorable notaries of Asia!

The Asian region is rapidly developing itself into an important voice among the leaders of the global economy. Asia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diverse areas in th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global economy. For that purpose, today, cooperation and extensive exchange in the area of notarial services have been in demand more than in any other period, as notarial services stand at the forefront of legal culture - especially with its preventive judicial function - and support each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The notaries of each country are at the center of performance of such functions, and the role of the Commission for Asian Affairs, which represents notarial services in the Asian reg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Therefore, we would like to take today's annual conference as a timely and valuable opportunity for better understanding notarial systems, sharing experiences, and building a future-oriented and highly advanced notarial service system.

Lastly, through these exchanges, all Asian countries including Vietnam, Cambodia, Laos etc. as well as the member countries of the Commission for Asian Affairs, will be able to build mutual friendships with each other within the framework of civil diplomacy. This opportunity will unite each country's associations and notaries more closely. I hope these exchanges will continue uninterrupted.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thanks for the outstanding efforts of Ayush Oyunchimeg, President of the Chamber of Notaries of Mongolia, for organizing this year's conference, and I appreciate very much your friendly and amiable welcom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dear President and all distinguished guests.



## (2) 한국 공증제도 2013/2014 현황

(국문)

**한국의 2013/2014 공증제도 현황 (KOREAN)**

2013. 7. 18. 대한공증인협회

박 광 빈 (PARK Kwang Bin) 국제이사

**A. 회원 및 공증업무 처리 건수 변동 현황****1. 회원 현황**

○ 2010년부터 시행중인 공증인 정원 및 정년 제도 시행으로 협회 회원 수는 계속 감소중이며, 향후 몇 년간은 공증인 정원 수에 일치될 때까지 감소될 예정.

\* 정년제도 : 2017. 12. 31.까지는 80세 정년, 2018. 1. 1.부터는 75세 정년

\* 정원제도 : 지방검찰청 별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 정원 수 규정

- 전국적으로 임명공증인 86명, 인가공증인 190개소 등 총 276개소

○ 2013. 6. 20. 현재 회원 현황

연도 \ 구분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합계
2013. 6. 20.	48	312	360
2012. 12. 31.	48	316	364
2011. 12. 31.	40	339	379
2010. 12. 31.	38	355	393
2009. 12. 31.	33	361	394
2008. 12. 31.	33	353	386
2007. 12. 31.	31	338	369

## ○ 2013. 6. 20. 현재 각 지역별 공증인 현황

지 역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공증사무소 합 계
		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서 울	15	151	770	166
의정부	1	13	43	14
인 천	0	20	59	20
수 원	7	36	123	43
춘 천	2	3	10	5
청 주	2	7	26	9
대 전	4	8	26	12
대 구	3	20	76	23
부 산	3	17	75	20
울 산	2	7	25	9
창 원	4	8	27	12
광 주	3	14	53	17
전 주	1	6	22	7
제 주	1	2	5	3
합 계	48 (13.33%)	312 (86.67%)	1,340	360 (100%)

## 2. 공증업무별 처리 건수 변동 현황

- 공증제도가 중요거래의 증거를 보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위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예방 사법 기능을 수행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아직은 공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상호간 신뢰 부족에 기인하여 공증업무 처리 건수 현황에 큰 변동이 없는 상태.
- 2013년도부터는 성년 후견계약 공정증서 제도가 도입되고, 특히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이외에 토지나 건물 또는 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도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어 향후 공정증서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

## ○ 연도별 공증업무 처리 건수 변동 현황

※ 매년 12. 31. 기준 / 건

구분 연도	공정증서	정관인증	의사록인증	사서증서인증
2012	701,793	5,582	402,150	861,561
2011	873,252	8,556	438,766	891,413
2010	760,336	10,985	396,193	823,075
2009	684,944	33,035	498,386	785,977
2008	779,806	51,851	543,118	909,435
2007	799,089	55,156	553,276	1,084,259
2006	691,710	52,186	533,277	1,018,542
2005	690,330	54,004	505,817	1,087,973
2004	1,022,003	47,721	492,795	911,697
2003	2,095,568	57,780	567,896	855,869

## B. 공증 법령 변경 사항

## 1. 성년후견계약 공증제도 시행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장 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로 체결하도록 하는 후견계약 공증제도가 2013. 7. 1.부터 시행중
- 또한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 후견계약 종료시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 철회 가능

## 2. 집행증서 범위 확대 개정 공증인법 시행 예정

- 현재 금전·어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이용할 수 있는 집행증서를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증인법 개정안이 2013. 5. 28.자로 공포되어 2013. 11. 29.부터 시행 예정

- 집행증서 범위 확대 개정 공증인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1주제 발표 시간에 설명 예정

### 3. 선서인증시 거짓 선서의 경우 과태료 부과 시행 예정

-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공증인이 그 선서사실을 인증하는 선서인증을 할 때, 그 내용의 진실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거짓 선서를 한 후에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개정 공증인법도 2013. 11. 29.부터 시행 예정

## C. 현재 개정을 검토중인 공증 법령 사항

### 1. 전자공증 활성화 방안 검토중

- 한국에서 전자공증시스템이 2010년 8월 구축된 이후 그 활용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
- 이를 위해 2002년 전자공증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선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기 위하여, 2013. 6. 19.부터 6. 21.까지 법무부, 법학교수, 대한공증인협회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일본공증인연합회, 일본 법무성, 전자공증 시행 공증인 사무소 등을 예방하여 전자공증 시연 등을 통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시행에 관한 노하우 및 자료를 습득
- 한국은 이번 예방 결과를 참고로 금년 하반기 전자공증 관련 법령 개정작업 및 정책수립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
- 이번 방문시 일본공증인연합회 Mr. Tadahiko Miyazawa 회장님과 Council of UINL을 맡고 계시는 Kasumigaseki Notary Office의 Mr. Hiroshi Nakajima 공증인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에 감사

## 2. 공증지역 확대 제반 사항 연구 검토

- 대한공증인협회는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① 부동산 등기 원인행위의 공증제도 의무화, ② 협의이혼제도 등 가족법 분야에서의 각종 공증제도 도입 방안 검토 및 추진, ③ 지적재산권분야에서의 공증제도 도입 방안 검토 및 추진, ④ 사실실험 공정증서의 활용분야 확대 방안 검토 및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공증지역 확대 및 제도 개선, 법령 제·개정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

## D. 기타

### 1. 공증실무 개정판 발간

- 대한공증인협회는 현행 공증인법 및 상법, 민법 등 공증 법령에 따른 새로운 법해석 등을 반영한 『공증실무』의 개정판을 2013년 5월 발행
- 『공증실무』는 공증인과 공증인보조자들의 업무처리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실무관행을 통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공증업무 지침서 역할 수행

### 2. 2014년 3월 임원 개선 예정

-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등 집행부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현 집행부는 지난 2012. 3. 26. 선출되었고, 임기가 만료되는 2014년 3월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예정.

(영문)

## The State of Affairs of the Korean Notary System in 2013/2014

July 18, 2013

Korean Notaries Association

Executive Direct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Park Kwang-Bin

### A. STATISTICS: Members and Notarial Services Performed

#### 1. Number of Members

- The number of association members is decreasing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quota system and the retirement age system in 2010. In the coming years,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members will continue to decrease until the quota limit is reached.
  - \* Retirement Age System : The age of retirement is set at 80 until Dec. 31, 2017; it will become 75 starting Jan. 1, 2018.
  - \* Quota System : Introduction of a quota for the number of appointed notaries and authorized notaries per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Nationwide, 86 appointed notaries and 190 authorized notaries are allowed for a total of 276 notaries.
- CURRENT NUMBER OF MEMBERS AS OF JUNE. 20, 2013

Type Year	Appointed Notaries	Authorized Notaries	TOTAL
2013. 6. 20.	48	312	360
2012. 12. 31.	48	316	364
2011. 12. 31.	40	339	379
2010. 12. 31.	38	355	393
2009. 12. 31.	33	361	394
2008. 12. 31.	33	353	386
2007. 12. 31.	31	338	369

• CURRENT NUMBER OF NOTARIES PER DISTRICT AS OF JUNE 20, 2013

District	Appointed Notaries	Authorized Notaries		Total Notarial Offices
		Offices	Attorneys in Charge of Notarization	
Seoul	15	151	770	166
Uijeongbu	1	13	43	14
Incheon	0	20	59	20
Suwon	7	36	123	43
Chuncheon	2	3	10	5
Cheongju	2	7	26	9
Daejeon	4	8	26	12
Daegu	3	20	76	23
Busan	3	17	75	20
Ulsan	2	7	25	9
Changwon	4	8	27	12
Kwangju	3	14	53	17
Jeonju	1	6	22	7
Jeju	1	2	5	3
Total	48 (13.33%)	312 (86.67%)	1,340	360 (100%)

**2. Number of Notarial Services Performed by Category**

- The notarial system performs a preventive judicial function by preventing disputes through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regarding important transactions and allowing right holders to exercise their rights by verifying that the rights exist. However, the number of notarial services performed has held steady due to the general public's lack of awareness about the necessity of notarial services and lack of trust in the notarial system.
- New legislation now requires adult guardianship contracts to be drawn up into notarized deeds. Also, new legislation will allow certificates of execution to be drawn up in regard to seizures of land, buildings, and personal property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ly allowed seizures of money, securities, and other substitutes. Thus, it is anticipated that the demand for notarial deed preparation services will increase.

• CURRENT NUMBER OF NOTARIAL SERVICES PERFORMED BY CATEGORY

※ As of Dec. 31 of each year

Type Year	Notarial Deed Prepa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Certification	Corporate Minutes Certification	Deed Signed by a Private Person
2012	701,793	5,582	402,150	861,561
2011	873,252	8,556	438,766	891,413
2010	760,336	10,985	396,193	823,075
2009	684,944	33,035	498,386	785,977
2008	779,806	51,851	543,118	909,435
2007	799,089	55,156	553,276	1,084,259
2006	691,710	52,186	533,277	1,018,542
2005	690,330	54,004	505,817	1,087,973
2004	1,022,003	47,721	492,795	911,697
2003	2,095,568	57,780	567,896	855,869

**B. Changes to Notarization Related Laws**

**1. Adult Guardianship Contract Notarization System Implemented**

- It is now possible to create a contract entrusting wholly or partially the management of one's estate, the care of one's body, and the power of attorney to a guardian when one is or becomes incapable of managing one's own affairs due to incapacity from disease, disability, old age, or other grounds. A new notarization system for adult guardianship contracts that requires all such contracts to be notarized took effect on July 1, 2013.
- Also, if a guardianship contract expires prior to the appointment of a voluntary guardian supervisor, the principal or the voluntary guardian may withdraw their expression of intent to contract by means of a document certified by a notary.

**2. The Scope of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Expanded**

- An amendment to the Notary Public Act allowing certificates of execution to



extend to the seizure of buildings and land alongside the currently allowed seizure of money and promissory notes was promulgated as of May 28, 2013 and will take effect on November 29, 2013.

- The expanded scope of the certificate of execution is examined in detail during the presentation on the first theme.

### **3. Fines Levied for False Oaths Made During Authentication Proceedings**

- If a client knowingly makes a false oath as to a private deed's authenticity before a notary administering authentication proceedings, a fine of no more than 3 million Korean won will be levied against the perjurer. However, immunity or leniency may be granted if the false oath is rectified in a court of law. The foregoing amendment takes effect on November 29, 2013.

## **C. Proposed Amendments to Notarization Related Laws**

### **1. Review of Measures to Stimulate E-Notarization**

- Due to the low utilization of e-notarization since its introduction in Korea in August, 2010, measures to stimulate its use are currently under review.
- To achieve the stimulation of e-notarization, a delegation of Ministry of Justice officials, law professors, and Korean Notaries Association members visited the Japanese Notaries Association, the Japanese Ministry of Justice, and notary offices conducting e-notarization between the dates of June 19, 2013, and June 21, 2013. The delegation gained an understanding of the realities of the system and acquired knowledge and resources on how to implement the system effectively through watching demonstrations of e-notarization and conversing with the people in charge of the advanced e-notarization systems.
- Korea will use the knowledge gained from this visit to Japan as a basis to amend current e-notarization laws and establish e-notarization policies for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ward Mr. Tadahiko Miyazawan, President of the Japanese Notaries Association, and Mr. Hiroshi Nakajima of the Kasumigaseki Notary Office, currently in charge of the Council of UINL, for their wholehearted cooperation and consideration.

## **2. Research and Review of Matters Essential to the Expansion of a Notary's Role**

- As a long term goal, the Korean Notaries Association will continuously strive to expand the role of the notary by researching possible amendments to the law that focus on ① imposing a notarization requirement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② introducing a notary system for the family law sector; ③ introducing a notary system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ector; and ④ expanding the use of notarial deeds.

## **D. Miscellaneous**

### **1. Publication of the Revised Notarial Service Manual**

- A revised version of the 『Notarial Service Manual』 reflecting new legal interpretations of notarization related laws such as the Notary Public Act, the Commercial Act, and the Civil Act will be published by the Korean Notaries Association during May 2013.
- The 『Notarial Service Manual』 serves as a notarial service guidebook that establishes uniform standards and operational guidelines for notaries and their assistants.

### **2. Executive Board Member Election During 2013 March Plenary Meeting**

- The term of executive board members of the Korean Notaries Association, such as the president, is two years. The current executive board took office on March 26, 2012, and a new executive board will be elected at the annual plenary meeting in March of 2014.

## (3) 제1주제 발표문

(국문)

## 한국 공증제도의 효율성에 관하여 - 인도 집행증서 제도를 중심으로 -

2013. 7. 18. 대한공증인협회

유 원 규 (RYOU Won Kyou) 부협회장

### 1. 들어가는 말

‘공증제도의 효율성에 관하여’ 라는 주제는 지난 해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서울 정기회의(2nd Conference) 때도 다룬 것이다. 당시 우리는 한국 공증제도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먼저 한국에서의 공증업무 확대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소개하고, 이어서 한국에서의 공증 업무 확대에 대하여 전망한 다음, 공증 직역 확대를 위한 최근의 제안들을 다루었다.

우리는 당시 공증직역 확대를 위한 최근의 제안들을 소개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건물, 토지 및 특정 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곧 시행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 공증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2013. 4. 30. 마침내 공증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 공증인법은 2013. 11. 29.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공정증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것만 해당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나 건물 또는 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도 공정증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른바 “인도 집행증서”라는 새로운 유형의 집행증서가 출현한 것이다.

공증인법상 인도 집행증서는 개인 간의 일상적인 거래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 집행증서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증서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특별 집행증서라고 할 수 있다. 공증인법에서 그와 같이 특별히 정한 취지는 새로운 유형의 집행증서의 등장으로 인하여 혹시 초래될지 모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2. 인도 집행증서 도입의 의의

어느 나라의 법제에서든 재판은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신속한 재판이 소송법의 이념으로까지 승화된 이유이다.

채무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때에 비하여 그것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때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금전지급에 대한 것이나 물건인도에 대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동안 물건인도에 대한 것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았었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로 물건의 인도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실무상 제소전 화해 제도가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제소전 화해 제도는 분쟁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분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제소전 화해 신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제소전 화해에 대하여 당사자가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기판력까지 인정되어 법적으로 늘 문제가 되어 왔다.

새로 도입된 인도 집행증서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용되면 물건 인도 관련 분쟁이 대폭 감소할 것이다. 인도 집행증서의 도입으로 공증제도가 명실상부하게 분쟁예방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증을 통하여 분쟁을 감소시키는 것은 법률생활 속에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 3. 인도 집행증서의 특징

### (1) 대상의 제한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으로 삼고 있는 집행증서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증서로 한다. 이때 금전 또는 유가증권 기타 대체물의 지급청구권이기만 하면 되고 그 지급청구권 자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인도 집행증서의 인도청구권의 경우 인도청구권의 대상은 토지, 건물, 동산인바,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권에는 제한이 없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고, 동산의 경우에

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동산에 한하여 인도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 가) 건물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경우 인도청구권의 발생 근거가 임대차계약일 때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인도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① 공정증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차인의 인도의무가 발생할 것
- ②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도 반환채권자로서 그 증서에 의하여 금전청구권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는 계약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만일 쌍방이 더 이상 계약 갱신을 바라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하여 강제 집행 승낙조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 인도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건물 임대차의 경우 우선 제한적으로 시행해 본 다음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이다.

#### 나) 특정 동산

개정된 공증인법 규정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구체적인 동산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통령령은 현재 마련 중에 있는바 선박과 항공기를 제외한 나머지 동산에 대하여는 모두 인도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지고 있다.

#### (2) 쌍방대리나 자기계약 방식의 촉탁 불허

한국 민법 제124조에 따르면 법률행위 대리에 관하여 본인의 허락이 없는 한 대리인이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것이나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

다. 위 규정의 반대 해석상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이러한 방식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에 전혀 이론이 없다.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때도 이러한 법리는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따라 공증실무에서는 본인의 허락을 받아 쌍방을 대리하는 쌍방대리 방식이나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대리하는 자기계약 방식으로 법률행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쌍방대리 방식이나 자기계약 방식에 의한 촉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2항).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3) 집행문 부여에 대한 판사의 허가 필요

집행증서의 경우 그에 대한 집행문 부여는 원칙적으로 증서를 보존하고 있는 공증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민사집행법 제59조). 그러나 인도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집행문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4항). 이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 스스로 자기 검열을 강화하여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도 판사의 허가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강행법규에 위반된 인도 집행증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 (4) 집행문 부여 최소기간의 연장

집행증서는 원칙적으로 증서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 그러나 인도 집행증서는 작성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 괄호 안). 물건 인도의무의 이행에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의 경우보다 준비할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 4. 나가는 글

이번에 도입된 물건인도에 관한 집행증서 제도는 가장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 임대차 영역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서 공증인들로서는 만족할 만

한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면적 시행을 하다가 많은 시행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 공증의 신뢰가 하락할 것이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공증인들도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차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잘 정착될 때 비로소 공증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도 전면적으로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영역에서의 공증직역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느 때보다도 외국 법제에 대한 연구와 외국 공증인 단체와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문)

## **As to the Efficiency of the Notarization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 With the Focus on the Delivery Execution Deed System -**

July 18, 2013

Korean Notaries Association  
Vice president, Ryou Won-kyou

### **1. Introduction**

“As to the efficiency of the notarization system” was the presentation theme that was also featured at the CAAs 2nd Conference in Seoul, last year. At the conference of last year, in relation to the notarization system’s efficiency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we presented a short history of the extension of the notarial service in Korea, forecasting on its prospects in Korea, and current proposals for the extension of the scope of notarization.

Last year, as we introduced proposals for the extension of the scope of notarization, we revealed that we had been pressing forward the introduction of notarization as to juristic acts concerning delivery of buildings, land, and specific personal properties, and expressed

anticipation that it will be implemented in the near future. Notaries of Korea have desired it for a long time and our efforts have finally borne fruit. The bill for the amendment of the Notary Public Act finally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30, 2013. The amended Notary Public Act will become effective November 29, 2013. So far, compulsory execution by notarized deeds has been available only to claims for payment of money, securities, and other substitutes. However, in the near future, compulsory execution by notarized deeds will be available to claim for delivery of buildings, land, and personal properties. A new type of execution deed is introduced and it is a so-called “delivery execution deed.”

A delivery execution deed under the Notary Public Act will have significant meaning in ordinary transactions among individuals. A delivery execution deed is deemed as special one since it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several aspects distinguishable from execution deeds prescrib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The Notary Public Act intended such special characteristics as the means to minimize side-effects which adoption of a new type of execution deed might give rise to.

## **2. Meaning of the introduction of a delivery execution deed**

Legal proceedings take a long time in every country’s legal system. Winning a lawsuit often may not have much meaning if it takes a long time. Thus, the idea of an expedited trial system becomes elevated to the level of ideology in the regime of the legal procedure law.

It is obvious that voluntary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is more likely where a compulsory execution is possible with the notarized deed of a juristic act which gives rise to an obligation than where it is not. The same notion applies to the delivery of properties just like to the monetary payment. Nonetheless, Korea so far has not adopted the execution system with a notarized deed regarding the delivery of properties. Instead, the pre-litigation settlement system has been used in practice as the means of acquiring an execution authority in preparation for the case where an obligor does not voluntarily



perform a duty to deliver properties. However, since the pre-litigation settlement system is established under the premise of existence of dispute, more strictly speaking, elements for filing a motion for pre-litigation settlement cannot be said to have been satisfied in the stage of a contract formation, where a dispute has not yet occurred. Furthermore, the res judicata effect acknowledged in the pre-litigation settlement system has always posed a legal problem.

If the newly introduced delivery execution deed system is actively used, disputes related to the delivery of properties will be drastically reduced. The introduction of a delivery execution deed will serve as an occasion for extending the notarization system's function to prevent disputes. To reduce disputes by means of a notarization is the best way to realize the rule of law in the legal life.

### **3. Characteristics of a delivery execution deed**

#### **(1) Restriction on its scope**

An execution deed serving as an authority for execu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is a notarized deed drawn up with regards to a claim to payment of money, securities, and other substitutes. A claim to payment should be about money, securities, and other substitutes, and there is no other restriction on a claim to payment itself. On the other hand, a claim to delivery in a delivery execution deed is about land, buildings, and personal properties. There is no restriction on a land delivery claim, but in case of buildings, a restriction is imposed on a claim to delivery pursuant to a lease agreement. In case of personal properties, the Presidential Decree prescribes the types of personal properties as to which a delivery execution deed is available (Article 56-3 (1) of the Notary Public Act).

#### **A) Buildings**

In the delivery claim for buildings, where a lease agreement is the basis for a delivery claim,

a delivery execution deed can be drawn up conditioned upon satisfaction of the following elements:

- ① a lessee's duty of delivery occurs within 6 months from the date when a notarized deed is drawn up; and
- ② if a lessor is obliged to return deposit for lease, a lessee also can avail himself(herself) of the compulsory execution of a monetary claim as obligee for return of the deposit by means of the same deed.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of Korea, a lessee may request a lease agreement renewal from the 6 months prior to its expiration. A building delivery execution deed can be drawn up only if a consent to compulsory execution of a lessor's obligation to return deposit is included in case where both parties do not wish to renew a lease agreement. In case of a building lease, the legislator intended to permit a full-scale implementation if any other issues do not appear after the initial implementation with the above restriction.

#### B) Specific personal properties

According to the amended Notary Public Act, not all types of personal properties' delivery or return are included. Specification of included types of personal properties is delegated to the Presidential Decree. Presidential Decree is now under preparation. However, it is almost agreed on that delivery execution deeds can be drawn up as to all types of personal properties excepting ships and airplanes.

#### **(2) Prohibition against a request for a notarized deed involving dual agency or self-contracting**

Article 124 of the Civi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that without the consent of the principal an agent shall not perform a juristic act for the principal to which the agent himself/herself is the other party, or shall not become an agent of both parties to one juristic

act. As a matter of reverse construction, the foregoing is allowed with the principal's consent. The foregoing legal principle applies to the request for a notarized deed as to a juristic act. Accordingly, in the practice of notarial service, a client may request the preparation of a notarized deed as to a juristic act by means of dual agency with the principal's consent or self-contracting where one party represents the other party.

However, in case of a delivery execution deed, a client may not request a notarized deed by means of dual agency with the principal's consent or self-contracting (Article 56-3(2) of the Notary Public Act). Its purport is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a debtor's right including lessee's.

### **(3) Necessity of a judge's permission as to grant of execution clause**

A notary public grants an execution clause to an execution deed in principle since he/she has the custody of a deed (Article 59 of the Civil Execution Act). However, in case of a delivery execution deed, a notary public needs to get a judge's permission to grant an execution clause (Article 56-3 (4) of the Notary Public Act). It is intended to make sure that notaries implement strict self-censure when they draw up delivery execution deeds and do not violate mandatory statutes. Even thereafter, a judge's permission is required to check again whether a compulsory execution violates the mandatory statutes or not, and ultimately to prevent violations.

### **(4) Extension of the minimum period to grant an execution clause**

An execution clause cannot be granted unless 7 days pass after the execution deed is drawn up in principle (Article 56-4 (1) of the Notary Public Act). However, in case of a delivery execution deed, it is provided that an execution clause cannot be granted unless 1 month passes after the delivery execution deed is drawn up (Article 56-4 (1) of the Notary Public Act, included with parenthesis) with consideration that performance of a duty to deliver properties takes more time than that of a monetary payment in its preparation.

#### 4. Conclusion

Notaries in Korea are not yet satisfied due to many restrictions in case of a building lease area which will most extensively use the newly enacted execution deed system as to the delivery of properties. However, on the other hand, a full-scale implementation might trigger trial and error, which would harm the people's trust on notaries public, and such result is not at all desirable. Notaries also need to have time to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ystem. Trust on the notarization will be enhanced only when the new system is well implemented. Then a full-scale implementation of execution deed in the area of a building lease agreement will be realized and it will further help the extension of the scope of notarization in other areas. Thus, this is the time, more than ever, when we need research on the foreign legal systems, and lively and active exchanges of information and opinion with the foreign notaries association.

#### (4) 제2주제 발표문

(국문)

### 상속재산의 양도와 양도 과정에서 공증인의 역할 증대 가능성에 관하여

2013. 7. 18. 대한공증인협회

박 광 빈 (PARK Kwang Bin) 국제이사

#### 1. 들어가는 말

과거 한국에서는 재산상속은 극히 일부 부유층만이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일반 국민들은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다 경제발전으로 중산층도 어느 정도 부를 형성하고 거기에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일반 국민들도 재산상속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연히 상속재산의 양도도 현저히 빈번하여졌다.

한국 법제하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상속이 개시될 때 특별수익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미리 양도하는 것은 사망할 때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법제상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재산의 양도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그 중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단독행위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것 즉, 유증이다. 그 다음으로 피상속인과 재산을 수여받는 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것 즉, 사인증여의 방법이 있다. 사인증여는 계약으로 한다는 점을 빼면 유증의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실무계에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신탁의 설정이 있다. 신탁의 설정은 최근 신탁법의 개정으로 상속재산의 양도의 하나의 방식으로 향후 가장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공증인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양도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2. 한국에서의 상속재산의 양도 방식

### 가. 유증(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의 양도)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 한국민법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에 의한 유언이 아니면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민법 제1060조). 민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이 있다(민법 제1065조). 그 중에서 구수방식은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특별방식이고, 나머지 방식은 보통방식이다.

유언의 보통방식 중에서 공증인이 관여하는 방식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다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이 관여하기는 하지만 유언증서의 작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증서를 넣은 봉서를 만들고 봉서 표면에 적은 작성일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즉 공증인은 이미 작성된 비밀증서에 단지 확정일자인만 날인하여 줄 뿐인 것이다(민법 제1069조). 이

점은 일본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방식과 다른 점이다.

공증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공증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언 공정증서가 작성되는 것이고, 유언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된다. 유언자는 증인 2인을 참여시키고 공증인 앞에서 유언내용을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증서로 작성하여 낭독하여 주며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증서에 각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공증촉탁인, 즉 유언자가 반드시 유언 내용을 구수하여야 하고, 반드시 증인 2인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공정증서와 다른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에 대하여는 그 증서나 녹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검인절차를 밟아야 한다(민법 제1091조 제1항). 그러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원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유언집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 나. 사인증여

피상속인이 계약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사인증여라고 하는데 한국 민법은 이에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민법 제562조).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도 유언 방식은 단독행위를 전제로 그 방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방식에 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는 공정증서로 작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인증여도 당연히 공정증서로 작성될 수 있다. 사인증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다고 할 때 그 작성방법은 공증인법상의 증서작성 방법과 절차에 의하면 된다.

#### 다. 신탁

피상속재산의 양도는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은 계약, 유언, 신탁선언(단독행위)이 인정되지만 신탁선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의 양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유증과 유사하다.

문제는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계약에 의한 신탁을 이용할 수 있는냐이다. 한국의 신탁법상 종전에는 위탁자가 사망한 뒤에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

는 것이 가능한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유언대용신탁제도나 수익자연속신탁제도를 신탁법에 규정하면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그에 관한 신탁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 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제도는 공증인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것이 없다. 다만 그것이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가 사망한 다음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위탁자 사후 신탁설정여부나 그 내용에 관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든가 그 증서를 인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3. 상속재산의 양도에 있어서 공증인의 역할 증대 가능성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증인이 그 증서를 작성하므로 공증인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공증인이 유언 집행할 수 있는가.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자신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자신이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공증인도 일반적으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하여는 아직 한국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변호사 겸업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의 경우는 변호사로서 당연히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임명공증인의 경우 공증인법 제6조에 따르면, 공증인은 다른 공무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임명공증인의 경우는 보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얼마든지 유언집행자로서 활동할 수 있지만 보수를 받고서 하려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여겨진다.

2)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가 사망한 다음의 법률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위탁자 사후 신탁설정여부나 그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하고 없기 때문에 신탁의 성립여부나 그 내용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이는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제도의 신뢰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은 그것에 관하여 공증을 받아 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반드시 공증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증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그 증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신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4. 나가는 말

상속재산의 양도에 관하여 사회적인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면서 이와 관련한 학계의 연구도 전에 없이 활발하다. 상속재산이 여러 나라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도 많아서 다른 나라의 상속제도에 관한 관심도 높아 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증인도 국내법에 따른 상속이나 유언에 관한 전문지식을 부지런히 연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제도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영문)

## **The Transfer of a Decedent's Assets in Korea, and Possible Expansions of a Notary's Role in the Transfer Process**

July 18, 2013

Korean Notaries Association

Executive Direct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Park Kwang-Bin

### **1. Introduction**

Historically,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only the very wealthy were interested in the inheritance of property, and ordinary citizens did not take much of an interest. However, as the middle class came to accumulate more wealth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real property prices escalated dramatically, the middle class's interest in the inheritance of property has also increased. In tandem with this increase of interest, transfers of a decedent's assets have become increasingly frequent.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if a decedent transfers a portion of their assets to an heir during their lifetime, the transferred assets are taken into account as an advance against the corresponding heir's inheritance when the inheritance is divided among the co-heirs. Therefore, it is inevitable that such inter vivos transfers of property become intimately related to the transfer of a decedent's assets.

The Korean legal system acknowledges three methods of transferring the assets of a decedent upon the decedent's death. The most widely used method is the testamentary gift, in which the decedent unilaterally transfers the assets of their estate through a will. Another method is the gift causa mortis, in which the decedent and the receiver of property enter into a contract to transfer the assets of the decedent's estate upon the decedent's death. The legal provisions that apply to a testamentary gift also apply to a gift causa mortis; the only difference is that a contract is used as the medium. The final

method, which is not widely known, is the creation of a trust. It is expected that trusts will be more widely utilized as a method to transfer the assets of a decedent's estate due to the recent amendment of the Trust Act.

The foregoing transfer methods will each be examined below from the perspective of a notary.

## **2. Methods of Transferring a Decedent's Assets in Korea**

### **A. Testamentary Gift (Transfer of the Decedent's Assets by Will)**

A testamentary gift is a transfer of the assets of the decedent's estate by will, and no will may take effect unless i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Act of Korea (Article 1060 of the Civil Act). The Civil Act defines the five forms of wills as follows: holographic will, recording, secret document, notarial deed, and dictated instrument (Article 1065 of the Civil Act). The dictated instrument is acknowledged only if urgent circumstances exist, and the remaining forms are considered ordinary wills.

Among the ordinary wills, notaries are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the secret document will and the notarial deed will. However, although a notary is involved in preparing a secret document will, the notary does not participate in its actual drafting. A secret document will is drafted by the testator who then keeps it in a sealed envelope as prescribed by the Civil Act. The testator is required to obtain a notary's confirmation stamp within five days of the date of production written on the cover of the sealed envelope. Thus, the notary's role is merely to affix a confirmation stamp to a secret document which was drafted beforehand (Article 1069 of the Civil Act).

Article 1068 of the Civil Act provides the form of will in which a notary may substantially participate; the notarial deed will. The instrument used is the notarized deed of a will from the notary's perspective, and it is a notarial will from a testator's perspective. The testator must orally dictate the contents of his will to a notary in the

presence of two witnesses, and the notary must write down what is dictated and read it back so that the testator and witnesses may confirm the accuracy of the document. Then, the testator and each witness must acknowledge the accuracy of the document by affixing their signatures and names. A notarial will is different from ordinary notarized deeds since it requires that the testator as client orally dictate the contents of their will and two witnesses attest to it. Generally, when a testator passes way, documents or sound recordings pertaining to the testament must be presented to the court for the court's probate (Article 1091 (1) of the Civil Act). However, a notarial will need not undergo a probate procedure, and this aspect of the notarial will allows for the easy administration of the will. Because of this, notarial wills are used quite often despite the hefty expense associated with preparing them.

#### **B. Gift causa mortis (Gift Effective Upon Death)**

The decedent may transfer the assets of the decedent's estate by means of a contract. The method is called the gift causa mortis, and the Civil Act provides that the provisions governing testamentary gifts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ontract for a gift causa mortis (Article 562 of the Civil Act). However, since the testamentary gift is assumed to be a unilateral act, the provisions pertaining to the unilateralism of the testamentary gift cannot apply mutatis mutandis to a gift causa mortis.

Since all legal acts can be drawn up as notarized deeds, a gift causa mortis may also be drawn up as a notarized deed. If a contract for a gift causa mortis is drawn up as a notarized deed, it must follow the methods and procedures prescribed in the Notary Public Act.

#### **C. Trusts**

The assets of the decedent's estate may be transferred through the creation of a trust. A trust may be created through a will, contract, or a unilateral declaration of a trust. The method of declaring a trust is only valid if the settlor designates himself as the trustee; it

has no relevance to the transfer of a decedent's assets. The creation of a trust through a will is largely similar to a testamentary gift.

It was questionable whether the creation of a trust by means of a contract could be used as a method of transferring the assets of a decedent's estate. In the past, there had been a dispute as to whether it was legally possible to set up a trust using a contract that would take effect upon the settlor's death under the Trust Act of Korea.

However, the recent amendment to the Trust Act has legislatively resolved the foregoing issue by codifying the testamentary trust system and the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system.

The pertinent provisions are as follows:

Article 59 (testamentary trust)

① The settlor reserves the right to change the beneficiary if the trust falls within the description of any on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unless otherwise stipulated by the trust creating act.

1. a trust where the person designated as the beneficiary acquires a right to benefit at the time of the settlor's death; or
2. a trust where the beneficiary receives one or more payments originating from the remainder of the trust after the settlor's death.

② The beneficiary in the foregoing paragraph ① subparagraph 2 cannot exercise their right until the settlor passes way. However, if it i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trust creating act, the stipulation shall be complied with.

Article 60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It may be stipulated in the trust creating act that if the beneficiary passes away, the beneficiary's right to benefit extinguishes and another person newly acquires it. This provision includes cases of successive acquisitions of a right to benefit through the beneficiary's death.

From the perspective of a notary, the testamentary trust system and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system are both ordinary legal acts and not particularly special. Nonetheless, because the foregoing trusts define legal relationships that take effect after the settlor who created the trust passes away, it is advisable to have a notarized deed drawn up or have the trust document authenticated in order to prevent disputes regarding the creation or contents of the trust from arising after the settlor's death.

### **3. Possible Expansions of a Notary's Role in Transferring a Decedent's Assets**

#### **A. Notarial Wills**

When the assets of a decedent's estate are transferred through a notarial will, the notary plays a significant role since the notary is responsible for the drafting of the will. One might ask whether a notary is allowed to administer a will. Of course, a notary who draws up a notarial will cannot function as its administrator. The issue is whether a notary can act as an administrator of a will if the notarial will was drawn up by another notary; this issue has not been addressed in Korea. However, it seems logical that an attorney who also performs notarial services may act as an administrator of a will in their capacity as an attorney. Under Article 6 of the Notary Public Act, an appointed notary may not perform other official duties, operate a business, and may not become a representative or employee of neither a commercial company nor a for-profit incorporated association. However, a notary may conduct business that does not require them to work full time or hinder their performance of a notary's official duties,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Justice.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foregoing provision, it seems that an appointed notary may freely take on the role of an administrator of a will, but the notary must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Justice if they expect to receive payment for their services.

#### **B. Trusts**

As aforementioned, the testamentary trust system and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system

define legal relationships that take effect after the settlor who created the trust passes away, making it difficult to ascertain the validity of such trusts if disputes arise regarding the creation or contents of the trust after the settlor's death. This vulnerability undermines the solidity of the testamentary trust system and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firm with the notary whether the testamentary trust or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will be notarized. The most desirable course of action is to obtain a notarized trust deed, but if personally obtaining a notarized trust deed is not feasible, the Trust Act must be amended to require an authentication of the trust deed at the very least.

#### 4. Conclusion

As social interest in the transfer of a decedent's assets increased, related research in the academic field has become livelier than ever. Also, since there are many new cases where the assets of the decedent are dispersed across several countries, there is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 inheritance systems of other countries. Because of this, it is advisable for a notary to continuously strive to acquire up-to-date specialized knowledge concerning inheritance and wills under both domestic law and other countries' systems.

#### 5. 마치며 – 몽골측의 환대

몽골측은 회의 준비를 잘 해준 것을 비롯하여 각국의 참석자 전원을 위하여 전통가옥에서의 식사와 칭키스 칸 추모관 및 13세기 몽골 테마 파크를 관람할 수 있도록 몽골 공증인협회 회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었다. 울란바토르에서 이동을 하여야 하는 각 장소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고, 도로 사정도 좋지 아니함에도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준 몽골 협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